

주제회의  
어린이청소년

공교육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소희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부모]

## 1.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불평등의 현실에 대한 의견

‘불공정’과 ‘불평등’의 문제는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거 학교 현장에서 약자가 학생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약자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학생들이 (부모의 소득 수준, 학생의 성적 등 어떠한 이유로든) 학교에서 받아왔던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처벌법, 김영란법 등 약자를 배려하고 강자의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추진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 긍정적, 부정적 효과도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공교육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가 느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대면수업의 부재가 학생들에게 학습, 그리고 수면과 식습관 등 일상생활 전반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이제 교육 불평등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에서 접근해야 하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구조적 문제들을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미래는 과거에 대한 분석과 현실 인식을 통해 그려져야 합니다.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과 학생인권조례, 아동학대처벌법 등 제도적 뒷받침이 생긴 현재는 오히려 그 화살이 교사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커피 한 잔 드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학생인권침해와 학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미래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시점에 우리 광주시에서는 ‘인권’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라는 지역명에 ‘정신’이라는 단어까지 붙는 세계적 인권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두발 자유화와 학습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만이 인권 일까요? 적극적 교육활동이 무고한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또 그로 인해 학부모 민원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의 권리는 인권이 아닐까요? 나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순간 교실에서 교사가 배제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다른 학생들의 권리는?

민주화 도시 광주시에 사는 광주시민으로서 그 누구도 소외받는 아동이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행정과 지역사회 모두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만으로 교육 불평등이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학교뿐만이 아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와 문제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정권과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가 아닌, 시간이 조금 더디더라도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고민해야 하고 지역사회인 우리 광주시에서부터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그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광주에서 개최되는 것,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공교육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교육이 제대로 서야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그나마 해소될 수 있음을 코로나를 겪으며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3. 제1 발제(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불평등의 현실)에 대한 질문사항

교육 불평등의 현실에 대해서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극명한 인식의 차이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의미한 시도라 생각합니다. 다만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시도와 접근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연구원님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질문드립니다.

저는 불평등의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정확한 이분법적 논리는 아니더라도 강자와 약자에 가까운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님께서서는 생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 수준을 넘어선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혁신학교를 일례로 들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에도 학교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평등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학생의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책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 처벌법 등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고 이가 악용되어 현재 더 약자의 입장인 자는 학생보다는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4. 제2 발제(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포용적 미래교육)에 대한 질문사항

교육 불평등은 단순히 학습격차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다차원적 문제로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중앙정부의 교육불평등 해소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언급하기에 조금 민감한 사항이긴 하지만,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광주시 세금으로 공산주의자를 기념한다는 뜻이 연일 보도되는 등 광주시가 현재 정책의 중심에 있고, 광주 시민 또한 이에 휘말려 분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율성 기념사업 시작은 역대 과거 노태우 대통령 정부에서부터 88 올림픽 시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는 마치 광주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며,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중앙정부의 사실 인식과 문제 극복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안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뿐만이 아닌 다른 분야의 국가정책 수립 및 추진 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을 수립하면 당연히 그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통 ‘탁상행정’을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 효과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각 입장의 요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교육 불평등뿐만 아닌 백년지대계라 불리는 교육정책 수립 시 중앙정부의 입장만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주체와 당사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포함한 각 입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장치가 법제화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간담회나 공청회 같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자리가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는 세계인권도시로서 이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5. 기타 의견

광주시 학부모 대표의 입장에서 ‘어린이청소년 주제회의’에 참석하게 됐는데,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자녀가 특성화 고등학교인 광주여상 2학년인 시점에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고교 시스템 특성상 교육불평등에 대한 나의 고민이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인 국가적 재난 상황과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 선택이지만, 자녀가 교사나 의사 등 구체적인 꿈이 없는 것에 대해 제가 부모로서 역할을 못 해 발견을 못 해준 것은 아닌지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에 털어놓으니 ‘요즘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없다.’ 아이들은 ‘돈 많은 백수’를 꿈꾼다는 방송을 보고 저와 자녀의 선택에 대해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돈을 벌고, 독립하고 싶다’는 아이의 꿈을 현실화시키는데 부모와 학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은 선택의 문제이지, 의무가 아니며, 대학 진학을 먼저 하고 취업의 순으로 인생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짧은 고용과 더 많은 불안으로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원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예전과 비교하자면 더욱 치열한 생존경쟁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성화고교 학부모의 입장을 넘어서 모든 학부모에게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 생각하는데, 선생님께서 다차원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 모델로 ‘광역단위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방법의 하나로 ‘진로컨설팅과 생애사적 후견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인상 깊었고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